

농지 불법 전용해도 사후조치 미흡

캠핑장 등 이용하는 경우 잇따르지만 적발되도 소액의 벌금만 납부 경기도가 38%로 최다 적발... 김종희 의원 "고발조치 등 신속 이행을"

한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8%(1218건)로 농지 불법 전용이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였다. 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캠핑장은 29건, 운동시설은 22건이다.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455건, 성실경각지시 등 조치는 115건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천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2016년 7월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뒤 현재 다시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다.

파주시에 있는 다른 캠핑장은 농지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불법 전용이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희 의원은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을 적발하고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 되었을 경우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을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불법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 개발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균된 밀 '오프리'를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野 주장이 더 위헌적”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뜻하지만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北, 헌법상 국가 아냐...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돼
비준 대상은 남북합의서... 현재·대법 등도 조약 적용 안해”

이러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독단이라고 비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북한을 거론하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대법원은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현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뉴시스

“정보의 홍수 ‘가짜뉴스’ 온상 작용”

이낙연 총리, “대중매체 편향성 경쟁... 균형자 역할은 공영방송”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4일 "끊없는 기술발전과 정보욕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정보의 홍수는 급기야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조작정보의 온상으로까지 작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변화에 직면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플랫폼이 등장해 정보시장의 관도를 바꾸고 있다"며 "방송을 능가하는 파급력을 지닌 디지털 매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1인 매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매체들은 이제 공정성으로 경쟁하기보다 편향성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중매체의 기능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공영방송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의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할 중심축, 매체들의 신뢰되는 편향을 수렴할 균형자, 불확실한 미래의 방향을 제안할 나침반의 역할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매체는 역시 공영방송"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시민단체, '정책연구 허위 발주' 의혹 여야 의원 5명 고발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을 허위 발주한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와 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중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다시 돌려받는 사례, 표절 및 명의 도용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경영기술포럼, 한국조세선진화포럼 등에 발주한 용역에서 표절 및 명의 도용 의혹,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정책연구용역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의혹

(백재현 의원)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 3건을 발주하고 용역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1220만원을 챙긴 의혹(이은재 의원)이다.

아울러 ▲비공식보좌진 가족에게 85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1100만원 상당을 챙긴 의혹(강석진 의원)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 2건을 발주하고 6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황주홍 의원)도 포착됐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